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당적 실현을 위하여

나. 작 성 자 : 황 광 우 外

다. 발행처(일) :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지부 (2000. 9)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지부」에서 제작한 《1차학습토론 자료집》으로 통일운동 등 남북문제와 관련한 수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중 다음에서 지적한 글은 사회주의로의 변혁 및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는 글이다.

나. 문제점

첫째, '수요학습 토론을 위하여'(황광우)에서 당내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토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정당화하고 이의 지향을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학습은 당원의 3대 일상 임무이다... 어떻게 싸워 우리는 집권할 것인지, 집권하여 어떻게 세상을 개조할 것인지, 사회주의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당원의 올바른 세계관과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참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과제는 참으로 많다..."(머리말중)

둘째, '미국문제 해결없이 민중이익 없다'(김영옥)에서 ① 한국사회를 미국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종속된 식민지사회로 간주하고 ②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통일방안 실현"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

국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분단은 ...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외세에 의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침략까지 용인하는 근거로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중략... 미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을 극복하는 총체적인 한국사회변혁을 본래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대목은 실천상의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실현-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통일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8-9면)

셋째, '남북정당회담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이산)에서 ① 한국변혁운동의 좌표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동조한 것이며 ② 국가보안법을 반통일법, 반민족법 등으로 폐도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③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④ 북한의 주체사상을 대중적 토론, 학습의 장으로 이끌어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18-24면)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과제 및 대남투쟁노선을 여과없이 수용동조하여, 이의 투쟁을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운동의 관점을 바로 세우자'(장원섭)에서 자신의 전략적 노선이 사회주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진보적 사상이 자라날 수 있도록 통일운동이 노동자들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며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우리는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소위 제3의 길인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인민들이 장악소유하지 않는한 우리는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것이다... 운동과 혁명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 관점과 능수능란한 전략전술이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에 의한 모든 착취와 억압을 철폐하기 위하여 생산수단과 국가주권을 인민이 장악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진보적인 역량은 미제의 군정이 없다면 정권을 장악하여 사회주의로 능히 나갈수 있는 역량이었다... 그간 남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문제는 남로당 파괴 이후 대중적으로 펼쳐본적이 거의 없었다...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시급히 만드는데에도 통일운동이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운

동으로 되어야 한다”(25-27면)

- 이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다섯째, '평화와 군축을 위한 투쟁을 전면화하자'(황이민)에서 6.15 공동선언의 한계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문제, 평화협정 체결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점을 들고, 남한의 진보진영이 평화군축투쟁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반미투쟁'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 노선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6.15선언은 분명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이 남북화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으며 특히 통일로 나가는 선결저요건이 되는 주한미군의 문제와 평화협정의 체결, 군비축소와 같은 한반도체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 내지 못했다...평화군축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미투쟁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해 낼수 있으며 강력한 대중적 반미투쟁으로의 성장을 가능케 할것이다”(37-38면)

3. 總 評

이 문건은 통일문제 등 남북문제를 학습토론한다는 미명하에 여러편의 글을 통해 한국의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투쟁, 연방제통일방안 실현” 등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및 북한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용공성(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1年 4月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件名: "전투병 파병반대! 국민투표 실시하라!"

나. 作成者: 민주노동당

다. 發行處(日): 민주노동당(2003)

2. 分 析

가. 성격

이 문건은 2003년 민주노동당에 발행된 총 2쪽의 유인물임.

나. 내용 분석

● 이 문건은 정부의 이라크파병반대, 이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

0. "... 우리의 젊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의 진실,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사상자 6천여명, 이라크 민간인 사상자 수 십만명... 한국은 미국의 543번째 주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pp.1-2.>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정부의 이라크파병반대, 이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정당차원에서 비판과 대안적 국민투표 결정을 내놓고 있는 것인 바, '문제없음'의 범주에 해당된 것으로 분류됨.<끝>

2003年 12月 01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1. 對 象

- 가. 文件名 : 「민주노동당 통일방안(초안)」
- 나. 作成者 : 불 명
- 다. 發行處(日)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2000년 8월 30일)

2. 分 析

가.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민주노동당이 통일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임. 전체적으로 4단계를 들고 있으나, 내용상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제시하는 연방제 방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또한 본 문건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지향목표가 '노동자 민중 주체의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밝혀 사회주의가 이들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음.

나. 문건의 내용과 문제부분 검토

(1) 본 문건은 통일에 이르는 4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주요과제와 전제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 번째 단계인 '민족연합'의 단계에서부터 남한측이 해야할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등과 작전통제권 환수 등 통상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줌(6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문건은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교묘히 수용하고 있는 수준의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본 문건이 제시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통일연방헌법을 제정할 연방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남북 동수 + 해외 10%로 연방의회(단원제) 구성”을 제의하고 있는 바(6면), 이러한 주장 역시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다분히 친북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임.

(3) 또한 미래에 구성할 연방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노동자 민중 주체의 자주적 단일정부 수립”을 강조하고 있으며(7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의 모순을 지양”하고(7면), “남측, 토지소유독점 철폐,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제시하고 있음(8면). 또한 “민주적 사회주의적 사회경제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두는 경제체제, 직접 생산자와 생산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제체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9면),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사회주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하 여백>

2021. 5. 19. 11:17:11

公安問題研究所

新北京

01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민주노동당이 통일방안 초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임. 전체적으로 통일로 가는 4 단계를 상정하고 각 단계별 전제조건과 이행과제를 들고 있으나, 내용상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제시하는 연방제 방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또한 본 문건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지향목표가 '노동자 민중 주체의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밝혀 사회주의가 이들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문건은 좌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나. 내용 분석

(이하 여백)

● 이 문건은 정부의 이라크파병반대, 이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

○ "우리의 권을이름 국유화로 내줄 수 없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사실자 5천여명, 이라크 파병한 사상자 1만 5천명... 한국은 미국의 30번째 주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원문>

3. 總 評

결론적으로 이 문건은 정부의 이라크파병반대, 이의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정당차원에서 미관과 대안적 국민투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임. 이 '문제없음'의 범주에 해당된 것으로 분류됨. <원문>

2001 年 9 月 17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나. 作 成 者 : 불명(내용상, '민주노동당산하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2003. 4.23일)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이의 대상에서 언급한바, <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이다.

작성자의 경우는 '민주노동당 산하의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순수한 학문적 입장보다는 완전히 정치적 측면의 관점이 중점으로 언급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일단 전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체는 결코 단순한 전쟁의 반대나, 반미 관점의 주장이 아니다. 民族矛盾(민족모순)과 階級矛盾(계급모순)의 관점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 전제 차원의 미국에 대한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對美戰略을 자체를 지지하는 측면이다.

실제는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을 전제하는 반미투쟁을 국내에서 활성화 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인 투쟁의 전술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단 분석의 대상이 된 본 문건 자체에서는 원론적인 투쟁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미국과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외형의 측면에서 일단 전쟁은 끝났으나, 실체는 이제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우리도 미국의 핵무기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p.1의 본문9-10행)라고 전제하며, 미국을 핵을 무기로 하는 침략국으로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미 관점의 주장이 아니다.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관점에서 미국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력 자체를 우리 한국을 대상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내용이다.

p.1의 1-16행 : “미국의 이라크..... 뿐입니다.”

2) 한국내의 진보적 단체들의 경우는 반전투쟁을 계기로 하여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p.2의)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반전 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을 전제하는 반미투쟁의 활성화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p.2의 <성과점>의 내용 전체.

3) 위주장의 연장선에서 <2. 반전운동, 반전위원회의 이후 방향>(pp.2-3)의 목차하의 내용이다.

본 문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반전운동’자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활성화를 전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결국 ‘반전운동’의 기본목적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차원의 반미투쟁의 활성화가 목적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투쟁에 견인하는 방법(전술)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4) ‘반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평화콘서트, 선전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의한 전세계 변혁을 전제하는 투쟁의 일환으로서 구체적인 투쟁의 실천에 대한 언급의 내용이다.

p.3의 <3. 반전위원회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와 pp.3-5의 <113주년 세계 노동절>의 목차하의 내용 전체.

3. 總 評

<민주노동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운영위원회 >라는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전체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순수한 입장보다는 정치적 측면의 관점이 중점으로 언급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한 전쟁의 반대나, 반미 관점의 주장이 아니다.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의 관점에서 미국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북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미전략을 지지하는 찬동하는 관점에서 미국의 북한에 압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는 '반전 투쟁'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하나, 실제로는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을 전제하는 반미투쟁의 활성화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인 투쟁의 전술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투쟁에 견인하는 방법(전술)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단 본 문건 자체에서는 원론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의한 전세계 변혁을 전제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반미투쟁의 선동을 전제하는, 즉 NL PD 합성의 <용공> 성의 문건으로 판정된다.

2003 年 5 月 1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전국예술문예일꾼들에게 드리는 글

나. 作 成 者 : 불명시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3.7.19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예술문예 활동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유인물로,

2. 미국이 북한인권을 들어 대북봉쇄를 취하는 등 북한침략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1쪽),

3. 나아가 한나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1-2쪽).

4.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민중을 선도하는 예술일꾼들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모든 거짓선전들이 전쟁의 전주곡임을 널리 알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3쪽), 이는 곧 반미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 하겠음.

3. 總 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반미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므로 반정부성향의 유인물로 사료된다.

2003 年 8 月 10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趙 鑛 官

印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2003.8.12

1. 對 象

가. 文 件 名 : 창조적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론(초안)

나. 作 成 者 : 不明示

다. 發 行 處(日) : 未 詳

2. 分 析

가. 性 格

이 文件은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론 초안으로 담겨진 性格의 油印物임

나. 內 容

(1) '사이버운동의 필요성'에서

1) 노사모와 촛불시위는 사이버운동의 촉발이며, 사이버공간의 정치 논쟁은 대중투쟁의 맥락이며, 서프라이즈와 오마이뉴스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중의식화 사업의 가능성은 확인시켰다고 하였음.

“...노사모의 사이버운동으로 촉발...”(1쪽, 3행). “...여중생 사망...촛불시위...앙마...”(1쪽, 13-16행). “최근 대중운동...평가...지점은...사이버공간의 정치적 논쟁이 대중투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1쪽, 25-26행). “서프라이즈...오마이뉴스...두 사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중의식화 사업의 가능성은 확인 되었다.”(2쪽, 5-22행)

2) 필자는 자주와 통일을 이끄는 진영이며, 사이버운동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사이버 구축 후에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음

“자주와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진영의 문제점 중 하나는...서로에게 열려 있지

못하고...토론과 합의가 부족하다. ...기술적 대안은 사이버 공간 활용이다.”(2쪽, 26-38
행).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사이버 구축 후에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이...다.”(3쪽, 22-23행)

(2)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사이버운동의 관점 정립’에서

3) 사이버 공간의 속도와 파장력은 정치담론 생산 -> 생산된 담론의 외연 확대는
비전문 글쟁이들에 의해서-> 폭발적 외연 확대는 열성적인 독자들에게 의해서-> 정치
담론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이 읽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좌중 압도 순이라고
하였음.

“첫 번째 단계는...정치담론이...생산된다. 두 번째 단계는...1차적 담론은 비전문 글
쟁이 들이 맡고 있다. ... 세 번째 단계는 폭발적 외연의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정치담론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의 몫이...다.”(4쪽, 8행에서 5쪽, 31행).

4) 사이버운동의 관점은 ① 조직된 대중이 숨쉬는 곳, ② 사이버 공간의 속도와 파
장력, ③ 운영에 있어서의 참여의 구조 확립 필수, ④ 사이버운동은 성실성으로 채워
지는 것, 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연관된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면 대중조직화의
창조적 전형 창출 가능, ⑥ 사이버공간 게시판 활성화는 사이버운동의 관건적 문제라
고 하였음

“1.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조직된 대중이 숨쉬는 곳이다.”(3쪽, 1행). “2. 그 놀라
운 사이버 공간의 속도와 파장력은 어떻게 보장되는가?”(4쪽, 8행). “3. 자발성의 사
이버 공간은...운영에 있어서의 참여의 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5쪽, 36행). “4. ...사
이버운동은 성실성으로 채워진다.”(6쪽, 30행). “5.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연관된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면 대중조직화의 창조적 전형을 창출할 수 있다.”(7쪽, 11-12행).
“6.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게시판 활성화는 사이버운동의 관건적 문제이다.”(8쪽,
11-12행)

(이하 여백)

3. 總 評

이 유인물에는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론 초안에 대해 분석했으며, 그 정리는 아래와 같다.

1) 노사모와 촛불시위는 사이버운동의 촉발이며, 사이버공간의 정치 논쟁은 대중투쟁의 맥락이며, 서프라이즈와 오마이뉴스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중의식화 사업의 가능성은 확인시켰다. 2) 필자는 자주와 통일을 이끄는 진영이며, 사이버운동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사이버 구축 후에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3) 사이버공간의 속도와 파장력은 정치담론 생산 -> 생산된 담론의 외연 확대는 비전문 글쟁이들에 의해서-> 폭발적 외연 확대는 열성적인 독자들에 의해서-> 정치담론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이 읽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좌중 압도 순이다. 4) 사이버운동의 관점은 ① 조직된 대중이 숨쉬는 곳, ② 사이버 공간의 속도와 파장력, ③ 운영에 있어서의 참여의 구조 확립 필수, ④ 사이버운동은 성실성으로 채워지는 것, 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연관된 사이버공간을 이해하면 대중조직화의 창조적 전형 창출 가능, ⑥ 사이버공간 게시판 활성화는 사이버운동의 관건적 문제라는 등이다.

따라서 이 유인물에는, 이상의 정리와 같이,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의 필요성과 그 특징 및 관점의 정립이라는 초안으로 제시돼 있으며, 그 가운데 자주와 통일의 대중운동으로서의 사이버운동이라는 시사(示唆)도 담아지긴 했으나 사회주의를 찬양하거나 동조했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의 文件이라고 하겠음.(문제삼기 어려움)

2004年 5月 14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김 승 호 印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나. 作 成 者 : 이장희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96. 7. 19)

2. 分 析

가. 概要

본 문건은 위작성자가 「'96 평화·통일 민족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서 한미군사관계가 '예속성'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예속성'은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저해요소로 보고 한미군사관계에서 법제도적 예속성을 탈피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한미방위조약의 비상호성, 한미행정협정상의 불평등문제, 군사기지이전의 합의 각서"라며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기하는 내용임.

나. 主要內容 요지

1) 한미군사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피력하고, 군사적 독자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평등한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음.

* 예문: "우리도 당당히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미군사적 종속관계에서 탈피해야 할 때이다 ... "(1면)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의 군사적 불가침 약속도 우리에게 독자적인 군사적, 외교적 독립성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이 ... 한반도에 원치않는 긴장조성과 무력충돌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한미군사관계구조에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2면).

"이제 21세기의 한미관계는 과거 같이 일방적 특혜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또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의 개정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12면)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구조의 시정은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전면개정이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예문: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문제"(3-9면)

3) 한미 미사일각서는 한국의 군사적주권을 제약하는 각서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을 제약하는 제반 협약의 폐기 검토를 제기하고 있음.

* 예문: "한미 미사일각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82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각서이다 향후 한미 미사일각서처럼 한국의 방위 산업을 제약하는 제반 협약의 폐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11면)

3. 總 評

본 문건은 한미군사적관계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한미군사적관계의 협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본 문건 작성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념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음.

따라서, 본 문건은 이념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표현물로 판단됨. 끝 .

2001年 7 月 2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장 관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맑스주의 역사와 새로운 주체성의 실험」

나. 作 成 者 : 돌맹이

다. 發 行 處(日) : 불명(2002. 7. 4)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의 필명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로 추정되는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허재영의 강좌 내용을 편집해온 것으로,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그람시 등의 논리에서 주체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문건은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 레닌, 그람시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주장과 논리 속에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키는 어려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단순히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는 수준은 아님.

<이하 여백>

2003 年 1 月 21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員 崔 宗 賢 印

3. 總 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작성자의 필명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로 추정되는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허재영의 강좌 내용을 편집해온 것으로, 마르크스와 레닌, 그리고 그람시 등의 논리에서 주체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

본 문건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키는 어려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단순히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는 수준은 아님.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이념적 맥락에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문건은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 레닌, 그람시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주장과 논리 속에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키는 어려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단순히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는 수준은 아님.

<이하 여백>

2003 年 4 月 29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나. 作 成 者 : 이장희

다. 發 行 處(日) : 상동(발행일: '96. 7. 19)

2. 分 析

가. 概要

본 문건은 위작성자가 「'96 평화·통일 민족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서 한미군사관계가 '예속성'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예속성'은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저해요소로 보고 한미군사관계에서 법제도적 예속성을 탈피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한미방위조약의 비상호성, 한미행정협정상의 불평등문제, 군사기지이전의 합의 각서”라며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기하는 내용임.

나. 主要內容 요지

1) 한미군사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피력하고, 군사적 독자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평등한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음.

* 예문: “우리도 당당히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면 대미군사적 종속관계에서 탈피해야 할 때이다 ... ”(1면)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의 군사적 불가침 약속도 우리에게 독자적인 군사적, 외교적 독립성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이 ... 한반도에 원치않는 긴장조성과 무력충돌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한미군사관계구조에서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2면).

“이제 21세기의 한미관계는 과거 같이 일방적 특혜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하는 동반자 관계이며, 또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 불평등하게 체결된 조약의 개정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12면)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구조의 시정은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전면개정이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예문: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문제"(3-9면)

3) 한미 미사일각서는 한국의 군사적주권을 제약하는 각서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을 제약하는 제반 협약의 폐기 검토를 제기하고 있음.

* 예문: "한미 미사일각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82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각서이다 향후 한미 미사일각서처럼 한국의 방위 산업을 제약하는 제반 협약의 폐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10--11면)

3. 總 評

본 문건은 한미군사적관계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한미군사적관계의 협약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임.

본 문건 작성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념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음.

따라서, 본 문건은 이념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표현물로 판단됨. 끝 .

2001年 7 月 2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장 관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목 : 리영희교수의 대담록- 노 정권은 무식한 정권

나. 作 成 者 : '짚레꽃'

다. 發 行 處 (日) : <http://www.banmi.net>(2003.06.07)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짚레꽃'이라는 가명에 의한 <제목 : 리영희교수의 대담록- 노 정권은 무식한 정권>의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이다.

문건의 전체 내용은 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인식에서 문제를 리영희를 중심으로 하는 하여 질의와 응답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건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서 볼 때,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변한 것이 전혀없다는 전제의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이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체제는 미국에 사실상 예측된 정권이며, 民族毛盾(민족모순)에 의한 타도 대상의 정권이라는 전제의 내용이며, 이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입증하는 목적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부분을 예로 들며 이를 세부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대미인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리영희의 이영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며, "미국 방문을 전후해서 노무현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변한 것이 전혀없고 무식하다는 것....." (p.1의 중앙의 상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과로서 현재 미국의 경우는 남한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라고(여기서는 미국의 경우는 남한을 50년동안 지배한 것으로 단정 ; p.1의 하에서 18행)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정부를 단순히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다. 민족모순에 의한 계투 변혁투쟁 전제의 관점에서 체제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2)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사회는 미국의 세계전략속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전략에 의한 평가의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우방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p.2의 중앙 : <-7 김민웅-햇볕 정책..... >의 질문에 대한 리영희의 대답의 내용전체.

3) 2003년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하여 대만을 중국에 양보하고 북한과 빅딜을 할 것이며, 북한까지를 보호국으로 만들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미국을 견제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까지를 미국의 식민지로 할 것이라는 전제의 내용이다.

p.4의 하에서 11에서 p.5의 1행 : <24. 이영자의 질문에 의한 리영희의 대답 전체.>

4)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에 대해서 미국을 천사처럼 생각한다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며, 민족모순에 의한 변혁투쟁 전제의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다.

단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말자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삼가자는 주장이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 자체를 앞서 언급한 민족모순 차원의 투쟁에 견인하는 관점의 전술상의 양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p.5의 <'26 이영자'의 질문에 대한 리영희의 답변의 내용 전체. >

3. 總 評

‘절레꽃’이라는 가명에 의한 <제목 : 리영희교수의 대담록- 노 정권은 무식한 정권>의 제목하의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다.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전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인식에서 문제를 리영희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인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방문을 전후해서 노무현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변한 것이 전혀없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사회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전략에 의한 평가의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에 사실상 예속된 정권이며,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의 정권이라는 평가의 내용이다. 끝내는 북한까지를 식민지로 만들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미국을 견제하자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체는 현재의 한국사회와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모순에 의한 변혁투쟁 전제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건이다.

이런 문건의 특성은 민족모순 관점의 변혁투쟁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용공> 성향의 이론적 문건이다.

2003 年 9 月 4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오 문 균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
위원회>의 결성식에 보내는 격려사

나. 作 成 者 : 송두율, (2003. 8. 7)

다. 發 行 處(日) : 상동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은 송두율이 작성한 1쪽 분량의 유인물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이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결성식에 보내는 격려사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정부의 ‘준법서약서’ 폐지 결정이 해외동포들에게도 적용해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얼마 전 현 정부가 그러한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국내의 공안사범의 경우에만 <준법서약서>의 요구가 없어진 것이지, 과거 한국구적의 해외동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과이한 <유권해석>이 나와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1쪽)

(2) 해외민주인사들이 독재와 분단을 반대하고 민주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

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음.

< 예문 >

-<준법서약서>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왔던 것에 대하여...그러나 독재와 분단을 반대하고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정말 어렵고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는 바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따라서 오늘 결성을 보게 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을 넓혀 가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확신합니다. (1쪽)

公安問題研究所

3. 總 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문건은 현 정부가 추진한 '준법서약서' 폐지 결정이 해외의 민주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방선동하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촉구 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판단된다. < 끝 >.

나. 作 成 者 : 송경호 (2003. 8. 7)

다. 發 行 處 (日) : 상주

2. 分 析

1) 개요

0 이 문건을 송수송의 지정된 1회 분량의 유언장로서,

0 전반적인 내용은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구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결성서에 보내는 격려사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내용 분석

(1) 정부의 '준법서약서' 폐지 결정이 해외동포들에게도 적용될 나길 것을 선동하고 있음.

< 예문 >

“... 2003年 8 月 21 日
...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송 경 호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분단과 민주화의 변증법

나. 作 成 者 : 송두율

다. 發 行 處(日) : 2002년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2002. 10.17)

2. 分 析

가. 기본성격

분서의 대상이 된 문건은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교수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동안 親北의 간첩행위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귀국이 불허됐었던 송두율의 <분단과 민주화의 변증법>이라는 제목하의 문건이다.

구체적으로 2002년 10월 17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주관 세미나, 명칭은 <2002년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발표문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문건이다.

이런 분석의 대상이 된 문건의 경우는, 學術論文으로서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않고 일부에서 철학적 용어를 이용하여 학술논문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전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변잡기적인 주장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질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 북한의 공산정권에게는 正統性이 있으며, 남한에는 일제 하를 벗어난 해방정국에서 현재(김대중정권)까지도 正統性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내용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선전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의 정당화를 전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직접 관련의 내용을 인용하여 세부 분석한다.

나. 세부분석

1. '분단과 민주화의 통시성'(pp.86-88)이라는 소 제목하 내용의 일부다.
· 기본적인 전제로서 북한의 경우는 항일투쟁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를 수립했고, 계속하여 민족의 자주성의 고취를 위해서 努力했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먼저 북한의 정권에 대한 평가다 “항일 빨치산’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북의 전략에 대해서 남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자유세계’의 보루로서 친미반공을 내세웠다.” (p.87의 3-6행)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압축하여 북한의 공산정권에 정통성이 있다는 내용이며, 前提의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공산정권에 정통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2) 상대적 비교차원의 남한의 정권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경우는 일방적인 부정과 비판의 시각이다.

“비록 정당성에 있어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반민족 친일 세력’이 ‘친미반공’을 내세우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재 북귀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남쪽은 많은 약점을 안게 되었다 ”(p.87의 7-10행)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산정권에 비해서 남한의 경우는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앞서 언급한 통일전제의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당위화와 남한체제부정의 차원의 내용이다.

3) 결국 위 주장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공산정권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남한의 역대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일변도의 관점이다.

연장선에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도발한 서해 도발 자체를 남한과 미국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극단적인 차원의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정당화의 내용이다.

p.88의 내용 전체 : “서구화’라는 말해주고 있다.”

2. <분단구조와 분단체제의 공시성 >(pp.89-91)의 내용이다.

전체에 걸쳐서 은연중에 역대 남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保守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태극기인가 아니면 인공기인가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에게 단일기는 분명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p.91의 3-4행)라는 전제하에서, 남북이 합치는 복합성의 선형적인 사고를 해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공산정권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3. <정체성(正體性)의 변화> (pp.91-94)라는 소 목차하의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물론 뿌리깊은 ‘반공수구세력’의 저항과 신자유주의정책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 ‘국제무역기구 WTO’ 가입으로 생활처지가 어렵게 된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으로 ‘햇볕정책’의 빛이 바래지기도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었다.”(pp. 93-94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권에 대한 비판은 유보하나,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관점이며, 역시 현정권의 정책 자체도 비판의 관점이다.

4. <‘구조적 폭력’>(pp.94-96) 의 소 목차하의 내용이다.

북한이 자행한 서해의 도발 자체는 분단의 산물로 단순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남한의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북한 공산정권의 정당화와 더불어 대남공산화 전제의 투쟁전략에 대한 정당화의 내용이다.

3. 總 評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교수라는, 그 동안 친북의 간첩의 행위를 했다고 평가를 받는 송두율의 <분단과 민주화의 변증법>이라는 제목하의 문건을 분석했다.

이는 2002년 10월 17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주관의 <2002년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의 발표문의 하나로 되어 있다.

2. 分 析

위의 기본성격과 세부분석에서 언급한바, 학술논문으로서 기본의 양식을 갖추지 않고 철학적 용어를 일부 이용하여, 형식상의 학술논문의 형태를 띠면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개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 북한의 공산정권에게는 정통성이 있으며, 남한에는 일제하를 벗어난 해방정구의 상황에서 현재(김대중정권)까지도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전체는 은영중에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선전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의 정당화를 전제하는 통일 위장의 내용이다.

문건의 성격은 민족모순 계열의 주사파계 <용공>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2002年 10 月 3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오 대 문 균 印

I. 對 象

가. 文 件 名 : 경계인의 사색

나. 作 成 者 : 송두율

다. 發 行 處(日) : 한겨레신문사(2002.10.14, 한겨레신문사)

II. 分 析

1. 性 格

본 건은 독일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이자 철학자인 송두율이 국내 잡지 등에 기고한 글들과 그가 최근에 집필한 글들을 엮어 한겨레신문사에서 단행본 『경계인의 사색』이란 제명의 책자로 발행한 것임.

주요 목차 내용 구성은 ①제1부 “동/서/남/북의 만화경”에서는 문학잡지 『내일을 여는 작가』에 산문형식으로 실은 글 ②2부 “통일시대를 위한 성찰”에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 연 ‘통일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③3부 “또 다시 ‘내재적’으로 본 북한”에서는 북한 연구방법론인 ‘내재적 방법론’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부터 매년 점검하는 형식으로 쓴 글 ④4부 “새로운 문명을 위하여”에서는 1분에서 3부까지의 글들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쓴 글 ⑤5부 “하나의 기록” 2001년 봄에 일어난 자신의 사상 논쟁 등에 대한 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 內 容 分 析

첫째, 이른바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서’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조명하면서, 철폐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있다.

둘째, 이른바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면서,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 아직도 300여명에 가까운 양심수가 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가 엄연히 남아있고, 남북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는 대장정도 사

실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5쪽)

0“...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이러한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고, 군의 ‘주적’ 개념도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선뜻 환영하고 나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반공보수의 철학 이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부시 행정부마저 출범해 현실은 이래저래 어렵다 ...”(285쪽)

0“... 오랫동안 반미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남한에서 터져나온 1980년 5월 ... 보수 세력의 이러한 도를 넘어선 친미적인 정서로도 한미간에 걸린 많은 모순-‘주한미군’의 범죄 처리, 통상마찰 등-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간 사회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는 할 수 있지만, 보수우익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논거로 미국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회적 동의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40-41쪽)

셋째, 제3부 “또다시 ‘내재적’으로 본 북한”에서는 ‘내재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김정일의 통일관, ‘고난의 행군’, 북한의 현실과 이상,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 등에 대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 대하여 북한을 신비화하거나 덮어놓고 미화만 해서도 안되고, 북한을 악마의 화신으로 보고 철저히 파괴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129-130쪽)임을 지적하고 있는 등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삼기에는 미흡하다.

넷째, 김정일의 통일관은 김일성의 ‘통일유훈’ 관철이 핵심으로, 김일성의 통일관을 새롭게 해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뿐이며, 남쪽도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체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김정일의 통일관을 비호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146쪽)

다섯째, 황장엽의 <북한의 진실과 허위>, 1999년 <월간조선> 4월호 등 송두율이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들을 조폭으로 규정하면서, 이들과의 송사(訟事)와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비호하거나 체제전복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수준이다.(271-270쪽)